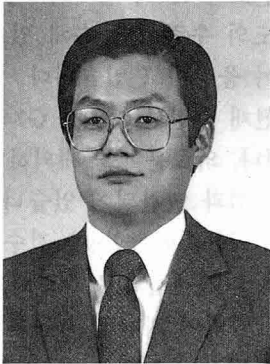


# 新한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黃東準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경영학박사



우리 방위산업의 실태를 진단해 보면 경제, 산업, 과학기술, 안보, 군사적 측면 모두 미흡한 실정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의不在와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형 방위산업의 모델을 구상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로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며,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체제의 변화와 함께 기술획득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안보** 및 군사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전망을 예상해 볼때 미래지향적인 독자 생존전략 확립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 변화가 한국에 대해 낙관적 기대와 비관적 우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는 우선 비관적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국제질서 재편과정을 촉발시킨 요인들이 이데올로기적 결집의 와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인 만큼, 한국으로서는 과거와 같은 진영간 대결구조로부터 파생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세력재편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 새로운 지역군사대국으로 등장한 것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위협과 연결될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한반도의 안정이 보장된다고 단언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함께 동남아 지역국가들이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확고한 국방력의 유지를 통한 독자적인 생존전략의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미루어 볼때 한국군의 군사력 개선은 한·미연합 대북우위를 목표로 하되 미래지향적인 기반 전력 구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주변강국들의 간섭으로부터 민족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과감한 기초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방위산업의 현실태와 당면 현안

\* 방위산업의 현위치

• 경제 / 산업 측면

현재 80여개의 지정 방산업체가 250여개 방산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방산 전담 종사인력은 3만여명(민수겸직 포함시 5만 3,000명)입니다. 이들중 10대 방산업체가 전체 방산매출액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위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91년 기준)은 국민총생산 대비 방산매출액 비중이 0.7%이고 국가 전체수출액 대비 방산 수출 비중은 0.1%로 미미한 상태입니다.

• 과학기술 측면

현재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기본병기 국내개발 및 양산체제는 완료된 상태이며, 일부 고도 정밀무기 체계개발능력을 보유한 실태이나, 내면 깊숙히 들어가보면 주요 핵심기술 부품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방 연구개발비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규모 면에서 매우 작으며,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투자비율은 2.5% 수준입니다.

또한 그동안 국과연(ADD) 위주의 연구개발 수행으로 이어져, 국방부문만의 폐쇄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 안보 / 군사적 측면

軍에서 운용하는 무기체계의 약 60%를 방산 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정책하에 주변국의 잠재위협에 대응할수 있는 방산능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략무기 소요충족이 불가능하며, 미래전략소요에 대한 투자가 지난 10년간 소홀하게 취급되었습니다.

\* 방위산업 당면 현안

- 방위산업 존속에 대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방위산업은 침체국면을 맞고 있으며, 방위산업 존립 의의에 대한 인식 또한 저하된 상태에서, 이미 구축된 방위산업 설비/인력에 대한 유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長期 방위산업 육성 전략/모델이不在한 가운데, 현안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실정으로 한국형 모델 정책대안이 시급한 때입니다.

- 군 첨단무기 소요에 부응할수 있는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의不在입니다
- 연구기관(ADD)의 연구개발능력은 미흡한 단계를 초과하여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방위산업은 침체국면을 맞고 있으며, 방위산업 존립 의의에 대한 인식 또한 저하된 상태에서, 이미 구축된 방위산업 설비/인력에 대한 유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長期 방위산업 육성 전략/모델이不在한 가운데, 현안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실정으로, 한국형 모델 정책대안이 시급한 때입니다

방산업체 생산기술 또한, 한계점에 처해있다 고 보아 전반적인 국방기술 기반 구축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 방산업체간의 자율적인 협력분위기不在입니다

제한된 소요물량으로 인해 업체간 지나친 경쟁이 유발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정책방향의 제시가 미흡합니다

정부차원에서 中·長期 방위산업 건설에 대한 확고한 방향제시가 미흡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적 정책개발 대안 제시가 소홀하였으며, 또한 국방부는 방산 소요창출 이외에는 정책수단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변화되는 안보 및 경제여건에 대처할수 있는 한국적 방위산업 발전 모델 정립이 시급하고, 신 정부의 방산정책 수립을 위한 소요군/정부/업체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新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 과제

\* 新 경제의 기본 구상

新한국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병의 치유와 2,000년대의 새로운 국민의식을 갖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30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93 경제전망특강」에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康奉均 경제기획원차관보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경제성장은 정부의 지시 통제에 의해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외국자본 그리고, 기술을 결합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87년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국민 각 계층의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 확산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 되었다.”

“新 경제의 발전원동력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의 발휘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행정, 금융, 재정분야의 제도 개혁과 경제주체들의 의식 개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때 앞으로의 경제 운영 방향은 개방, 자율, 협력(고통분담), 합리적 제도(효율성)의 개선과 운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우리의 방위산업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할것이냐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방위산업 정책 과제의 방향

- 방위산업에 대한 비전(Vision) 제시로 투자이익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미래 예측이 가능한 방위산업투자 및 경영이 될수 있도록 정부는 군사력 소요와 우리가 가져야 할 방위산업 분야별 규모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요소, 미래 잠재 위협요소에 대한 혼재되고 불확실한 정황을 판단하여 군사력 건설 방향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바탕위에 中·長期 계획소요를 방산업체에 통보, 파악해줄수 있는 제도 구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實例로 미국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SDI와 같은 것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업체도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려 할것입니다.

- 한국형 방위산업 모델의 구상입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소요에 대한 공급 달성을 하는 한편, 국방예산의 생산적인 활용측면에서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형 방위산업모델은 기술이 민수에 머물러 있으면서 민수과급효과가 큰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생산, 정비등이 통합체제로 구축되어야 하고, 군 특수 및 고유분야에 대해서만 국가소유/민간 운영방식(Go-Co)으로 전환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방산업체의 경우 통·폐합, 합병등 지속적인 개혁과 변신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탈바꿈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자율적인 업체의 협력 노력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의 추진은(정부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이를 위해 조직, 편성되어있는 방위산업진흥회를 구심점으로하는 역할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한 업체가 독점해서는 안되며, 업체간 공동출자 콘소시엄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도 그러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산업을 저마다 독점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탈피해야 하며 공동출자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지정에 의한 동원능력 확보 및 경제성 추구보다는 기술, 가격, 투자 요소 등에 의한 경쟁적인 방산육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제 방산업체에서 기술, 가격, 투자요소에서 뒤지는 업체는 과감히 도태시켜야하며, 1개의 방산업체 도산을 가지고 안보를 논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 국방연구개발체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ADD주도의 국방연구개발 수행체제에서 탈피하여 방산업체와 민간 연구기관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ADD는 특정 군사 고유분야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의 증가도 중요하나, 개발해야 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이 더욱 중요한 실정입니다.

과학자들은 과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기가 진정으로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냐를 판단하여, 목표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고로의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ADD의 임무/기능별 발전적 재원이 필요하며, 현재제하에서 우수 인력의 확보유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개발전담팀(가칭 : 첨단연구소)을 재구성하여야 할 시기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민간 연구기관과 방산업체가 할수 있는 분야는 책임과 권한까지 과감히 이양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연구개발 계약 및 관리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ADD의 국방연구개발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비평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국방연구개발을 ADD가 전권 통제하고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체주도 연구개발을 활성화 할수 있는 연구개발 계약제도의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할 것이며, 주요 획득사업의 종합 평가와 기술이전, 국산화 등의 검토에서 범 정부차원의 협력창구기능도 수행할수 있는 것입니다.

•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新 정부는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국가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시는 국방부,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과기처 등이 참여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지 못하고 있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는 범 정부차원의 사업추진을 통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선진기술 획득과 국방비의 생산적 운용을 통해 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기술획득의 내실화입니다

무기체계 분야별 소수의 전략적 기술도입

최근 북한의 핵 개발쟁점에서 보듯이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자산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新 정부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유명무실화된 방산관계 범 정부차원의 계획인 「방위산업 기본계획」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생산사업을 선정하여 기술획득내용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기술도입 생산시의 획득비용 상한개념을 완화 혹은 철폐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적 개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업체 협상 및 국제계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자율적인 공동협력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지, 국내 업체간 경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맺는 말

최근 북한의 핵 개발쟁점에서 보듯이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자산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방위산업이 자주 국방력 건설과 新경제 목표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에 대한 신 정부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향후의 방위산업정책에 대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합의와 추진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유명무실한 방산관련 범 정부차원의 계획인 「방위산업 기본계획」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新 한국 창조를 위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의 국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 미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국가안보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투자가 선행되어야할 때입니다. \*